

등록 일자 : 2008.05.14 22:59

[창간19주년]문화행정 한계 문화재단으로 풀자 울산에도 문화재단을 설립하자

문화예술계 요구 선별지원·불만 해소 구심점
문화욕구 충족 통한 '울산문화 정체성' 완성 필요
경기문화재단 '기폭제' 전국에 10여곳 넘어

문화예술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드높아지고 있다. 바야흐로 문화가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울산시 또한 이에 발맞추어 올해를 문화도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호언한 바 있다.

하지만 울산시의 문예정책은 의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의지를 수용하기에는 아직도 벗어나 할 구태와 관습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술행정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나아가 일정 부분 민간에게 그 권한을 넘기는 것은 이미 시대적인 추세다.

하지만 울산시는 수년 전 '울산 중장기 발전계획'(2002·울산발전연구원)을 통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대안기구 설립에 대해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와는 별도로 각 구·군은 지역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문화행사를 만들거나 규모를 키우고 있지만, 각 구·군간 경쟁만 키울 뿐 이를 통틀어 울산 전체를 아우르는 효과를 창출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점이 적지않다.

큰 틀에서 도시 전체의 문예정책을 이끌어 갈 전담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관 중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기구로 각광받는 지역문화재단에 대해 알아보고, 이미 이를 지자체에 도입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와 대응방안 등을 3회에 걸쳐 알아본다.

타 시도 지역문화재단, 얼마나 왔나

전국 각 지자체들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해 문화예술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역문화재단을 앞다투어 설립하고 있다.

지역문화재단은 시민들의 높아진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전문화한 문예정책을 수반하기 위해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문예전담기구를 일컫는다.

정부 산하 문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정책은 거주지 및 활동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걸쳐 지원할 가치가 있는 모든 예술 활동을 아우르는 반면 각 지역별로 설립되는 지역문화재단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기 때문에 보다 특화된 문예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지역문화재단에 투입 된 문화행정 전문가들은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지원해 놓고도 그 형평성 논란에 대응하기 바쁜 기존 행정의 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가능성이 높다.

전담기구라는 특성을 십분 활용 해 각계각층에 걸쳐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비판과 요구사항들을 한 군데로 모아 공론화시키고 그 결과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도 있다.

한 마디로 각 장르별, 지역별 고른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중앙 문예정책과 달리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집중 지원분야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현재 몇몇 지자체 및 지역 문화예술계가 산고의 고통을 겪고있다.

가까운 대구광역시는 올 상반기까지, 부산광역시와 경남도는 올 하반기까지 문화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조례입법을 추진하거나 운영안을 서둘러 공개하는 등 지자체 스스로 문예부흥을 선도할 새로운 문화구심점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문화재단 설립 붐은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다. 10년 전부터 지역문화재단을 운영해 온 지자체가 이미 상당수에 이르렀고, 지금의 붐 조짐은 앞서 문화재단을 설립했던 기존 지자체의 문예부흥 효과를 벤치마킹하려는 것이다.

지난 1997년 전국에서 처음 설립된 경기문화재단은 지역문화재단의 시발이었다. 이어 강원문화재단(1999년), 제주예술재단(2000년) 등으로 산발적으로 이어지다가 지난 2004년을 기점으로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등으로 순식간에 확산됐다.

이들 대규모 재단이 설립되는 틈틈이 인구 100만이 안되는 부천, 고양, 성남, 강릉, 청주, 성남, 김해, 전주시 등에서도 시민들의 드높은 문화욕구에 부흥하기 위해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했고, 현재까지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한 문예정책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왜 울산문화재단인가

광역지자체별 문예진흥정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문화재단'(또는 문예진흥위원회)이라는 명칭으로 제3의 문예전담기구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곳도 많다. 울산시의 경우 아직 후자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울산은 시 문화예술과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활동을 직접 지원한다. 물론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예진흥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한다.

하지만 이는 문예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견수렴 기구일 뿐 전반적인 문예정책을 도출하는 기관으로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

울산예총, 울산민예총, 울산문화원연합회 등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민간단체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들 단체도 시가 틀어쥐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의 수혜자로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만한 역량을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시와의 협상 줄다리기에서 누가 얼마나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단체로 지원금을 확보하는 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일 뿐 정작 시민들이 원하는 문예정책을 수립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은 '지역문화예술정책의 변화와 지역문예진흥'이라는 연구논총을 통해 각 지자체의 이러한 어려움은 전국에 걸쳐 대동소이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관 주도 행정으로는 전반적인 문예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기에도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문예정책은 문예 전반에 걸친 연구, 심의, 지원 등을 통해 발전하게 되는데 기존의 행정중심 정책에서는 요원한 일일 뿐이다. 콘텐츠 개발 등 지역문화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문화재단 설립은 늦출 수 없는 대세"라고 설명했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